

#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연구위원  
keiokim@kiep.go.kr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 통상질서가 메가 FTA로 급전환하면서 일본도 TPP, 일·EU FTA,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협상에 적극 참여
  - 2010년부터 미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2013년부터는 ASEAN+6의 RCEP 협상, 미국과 EU의 TTIP 협상, 그리고 한·중·일 FTA, 일·EU FTA와 같은 메가 FTA 협상이 개시됨.
  - 이들 메가 FTA 협상에는 세계 경제의 4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TPP(12개국) 42.4%, RCEP(16개국) 25.5%, TTIP(미국, EU) 53.7%, 한·중·일 FTA 18.7%, 일·EU FTA 36.3%에 달함.
  - 2014년 말 현재 일본의 FTA는 싱가포르('02.11월), 멕시코('05.4월), 말레이시아('06.7월), 칠레('07.9월), 태국('07.11월), 인도네시아('08.7월), 브루나이('08.7월), ASEAN('08.12월), 필리핀('08.12월), 스위스('09.9월), 베트남('09.10월), 인도('11.8월), 페루('12.3월) 등 13건이 발효 중이고, 호주와의 FTA는 2014년 7월 서명을 마친 상태.
  - 일본은 2013년 들어서부터 한·중·일 FTA('13. 3월 협상개시)와 RCEP('13.5월 협상개시), 일·EU FTA('13.4월 협상개시), TPP('13.7월 협상참여) 등 메가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기체결 FTA의 특징과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일본정부가 현재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메가 FTA 중 TPP와 일·EU FTA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메가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단,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의 무역구조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작성·공개하고 있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간 세계투입산출표(이하, EC-WIOT)를 사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 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함.
  - 일본의 기체결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는 일본 정부가 자국기업의 해외 생산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규정,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효과를 분석하고 일본기업의 FTA 활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그 다음 목적으로 설정함.
  - 일본의 TPP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12개 국가가 참여 중인 TPP 협상을 시장접근 분야와 규범 분야로 나눈 다음 각 분야의 협상 쟁점을 분석하고, TPP 협상의 성격상, TPP 본 협상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일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일본의 TPP 추진 전략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

- 본 연구에서 일·EU FTA 추진전략을 분석·평가하는 목적은 EU의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와 이에 대응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음.

##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음.
  -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음.
  -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함.

표 1. 일본의 부가가치 수출(2011년)

(단위: 100만 달러,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        | 부가가치 수출 |       |         |       | 수출(무역통계) |       |         |       |
|--------|---------|-------|---------|-------|----------|-------|---------|-------|
|        | 일본      |       | 한국      |       | 일본       |       | 한국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TPP-4  | 156,584 | 21.7  | 61,227  | 18.8  | 164,626  | 20.0  | 118,921 | 21.4  |
| (미국)   | 115,554 | 16.0  | 43,474  | 13.4  | 127,675  | 15.5  | 56,421  | 10.2  |
| EU-27  | 94,732  | 13.1  | 56,717  | 17.4  | 95,904   | 11.7  | 54,460  | 9.8   |
| RCEP-5 | 199,715 | 27.7  | 108,346 | 33.3  | 274,837  | 33.4  | 208,247 | 37.5  |
| (중국)   | 131,092 | 18.2  | 65,778  | 20.2  | 162,035  | 19.7  | 134,185 | 24.2  |
| (일본)   | -       | -     | 24,661  | 7.6   | -        | -     | 39,679  | 7.1   |
| (한국)   | 28,682  | 4.0   | -       | -     | 66,174   | 8.0   | -       | -     |
| 세계전체   | 721,963 | 100.0 | 325,586 | 100.0 | 823,184  | 100.0 | 555,209 | 100.0 |

주: 1. TPP-4는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4개국을 의미한다.

2. RCEP-5는 일본의 경우 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고,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5개국이다.

자료: EU-WIOT 2011, 웹사이트(검색일: 2014. 3. 2);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4. 6. 29)를 기초로 작성.

●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은 거의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음.

-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국내 중간재 생산을 유발한 비율은 77.9%에 달했고, 이를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
-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본의 중간재 생산 네트워크와 경쟁력이 뛰어난을 시사.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철폐와 누적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2. 일본의 gsc/gvc 지표(2011년)

(단위: 100만 달러, %)

|        | 일본      |       |         |       | 한국      |       |         |       |
|--------|---------|-------|---------|-------|---------|-------|---------|-------|
|        | gsc     |       | gvc     |       | gsc     |       | gvc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TPP-4  | 16,573  | 3.4   | 8,202   | 2.8   | 23,313  | 6.0   | 11,877  | 6.8   |
| (미국)   | 8,889   | 1.8   | 4,338   | 1.5   | 13,292  | 3.4   | 6,766   | 3.9   |
| EU-27  | 11,547  | 2.4   | 4,300   | 1.4   | 19,482  | 5.0   | 7,483   | 4.3   |
| RCEP-6 | 417,132 | 85.8  | 268,236 | 90.1  | 302,176 | 77.5  | 134,093 | 77.0  |
| (중국)   | 28,952  | 6.0   | 8,012   | 2.7   | 44,007  | 11.3  | 12,426  | 7.1   |
| (일본)   | 378,647 | 77.9  | 255,150 | 85.7  | 21,001  | 5.4   | 7,336   | 4.2   |
| (한국)   | 9,161   | 1.9   | 2,421   | 0.8   | 225,022 | 57.7  | 107,774 | 61.9  |
| 전체     | 485,906 | 100.0 | 297,566 | 100.0 | 389,758 | 100.0 | 174,075 | 100.0 |

주: <표 1>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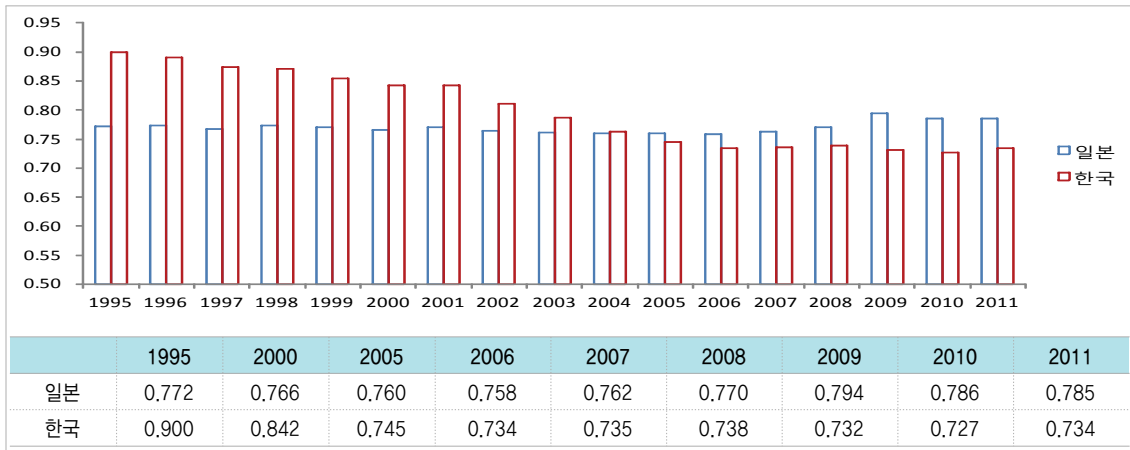
자료: EU-WIOT 2011, 웹사이트(검색일: 2014. 3. 2)를 기초로 작성.

●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1.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 지표 추이(1995~2011년)

(단위: 부가가치 기준 RCA 지수)



자료: 자료: EU-WIOT 1995~2011, 웹사이트(검색일: 2014. 3. 2)를 기초로 작성.

### 나. 제3장, ‘일본의 기체결 FTA 특징과 효과’에서의 주요 분석결과는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일본정부는 자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이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였고 강조하고 있지만,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국내 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음.
  -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한데,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물론 일본정부는 일·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 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음.
-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하였음.
  -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출원의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음.

- 넷째, 일본 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본 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음.

-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했던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 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4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이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일 협상이 매우 중요함.

-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게 동일하게 제시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음.

표 3. TPP 주요 협상 분야별 쟁점(2014.9월 현재)

| 분야   | 주요 쟁점 및 국가간 대립구도  |
|------|---|
| 농업   | - 주요 쟁점은 관세율, 관세할당, 국내보조<br>*(쌀) 미국·호주·베트남→일본·말레이시아<br>*(쇠고기) 미국이 일본에 한·미 FTA(40%의 관세율을 5년 내 95% 삭감) 수준을 요구<br>*(유제품) 뉴질랜드→미국, 미국→캐나다<br>*(설탕) 호주→미국, 호주·뉴질랜드→베트남   |
| 시장접근 | -(제1모드: 국경간 서비스무역) 전문직 자격증 및 면허의 상호인정 문제 미논의, 특급우편 서비스의 공정 경쟁 문제와 미래성장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 문제가 쟁점<br>-(제3모드: 상업적 주재) 베트남의 외자 소매업체의 진입규제와 말레이시아의 외자 소매 및 외식산업 진입규제가 쟁점<br>-(제4모드: 자연인의 이동) 상용관계자의 이동은 논의 중이고, 단순노동자의 이동은 논의에서 제외<br>*(전기통신분야) 시장접근과 규범설정에 대해 논의중<br>*(금융서비스분야) 말레이시아의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소유권 제한 요구가 쟁점<br>*(전자상거래) 미국의 실물거래와 동급의 자유화 요구→베트남·말레이시아가 국가간 데이터전송 거래 자유화와 데이터의 로컬 서버 저장 해제요구에 반발   |
| 규범   | SPS -이행메커니즘과 분쟁처리가 주요 쟁점: 미국→호주<br>원산지규정(RoO) -원산지누적(cumulation) 원칙은 합의<br>-(섬유) 미국의 yarn forward rule vs. 베트남의 cut and sew rule→short supply list를 둘러싼 협상<br>지식재산권(IPR) -의약품의 특허권, 저작권, 이행 분야에서 이견<br>*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patent linkage) 등을 요구<br>-(저작권 보호)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70년)과 저작권의 비친고죄화 요구가 쟁점<br>외국인투자 -ISD 조항의 도입과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이 쟁점<br>경쟁정책 -미국이 제안한 국영기업 규율(discipline), 즉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이 쟁점:<br>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미국 등이 비합치조치를 요구하는 국영기업 리스트를 제출<br>기타 -(노동) 분쟁처리 메커니즘: 미국·호주의 노동과 무역의 연계 요구에 베트남·페루·칠레가 반발<br>-(환경)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쟁점 |

자료: 보고서 제4장 요약.

● 셋째, 일본의 TPP 협상 전략은 자국의 농산물 시장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 시장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모토로 일본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음.
-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라.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의 분석결과는 아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일·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했던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EU FTA의 협상 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규정, 통관 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 환경 등임.
  - 이에 따라 일·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한·EU FTA와 EU·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일·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철폐 문제임.
  -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 전략에서 비롯됨.
  - 그러나 일·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조화, 수출입 원활화/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됨.
  - 결국 일·EU FTA의 진행 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임.

### 3. 정책 제언

####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 전략을 위한 과제

-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FTA 전략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나. 한국의 TPP 참여 전략상 검토 과제

- 한국의 TPP 참여 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 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셋째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다. 일·EU FTA 협상 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 일·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첫째,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둘째 일·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셋째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는 향후 TPP 참여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